

동아시아 ·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러관계: 북핵 해결 공조와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를 향하여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러시아 푸틴 정부는 2014년 3월 크림병합에 이어, 시리아 내전에의 군사적 개입과 종전 협상, 이란 핵협상에의 주도적 역할 등 국제무대에서 주요 행위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외교안보적 당면 현안은 미국과 서방의 對러 제재 해제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북한 핵 · 미사일 문제는 큰 틀의 미 · 러, 중 · 러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존 오바마 행정부 집권기 극심한 갈등 양상을 표출했던 미러관계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미러관계는 미중관계와 더불어 세계 정치경제질서 재편의 중심축이자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역내 안보질서 구도의 성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자 동아시아질서 재편 향배의 가능자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미러관계의 핵심은 △ 트럼프의 리더십과 친(親)러 행보, △ 트럼프와 푸틴 간 상호 호감과 친밀, △ 러시아의 대선 개입 스캔들 조사와 관계 개선의 장애요인화, △ 상호 기대감 속 불신 점증, △ 협력과 갈등 사안의 혼재, △ 미 의회의 對러 강경책과 영향력 제고, △ 외교관 맞추방, △ 시리아 내전과 북한 핵 문제의 우선 정책 현안으로의 대두 등으로 집약된다.

푸틴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① 북한의 핵 보유 불용; ② 한반도 비핵화 지지; ③ 군사적 조치의 반대와 정치적·외교적 해법의 강조, ④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 ⑤ 북한과의 선린우호관계 발전도모하에 북한의 핵 포기 결정을 유인해 내는 정책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푸틴 정부는 그간 비교적 관망하던 자세를 벗어나 북한 핵 · 미사일 문제 해법에 보다 적극적이며, 공세적 양태를 표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으로 복잡한 한반도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 · 러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북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 외교적 · 평화적 해법 등 양국 간 북핵 문제와 관련된 정책 공조 부문을 찾아 공통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 러시아의 건설적인 중재자적 역할 제고와 활용, △ 블라디보스토크 한 · 러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함, △ 미러관계의 한러관계와의 동조화 탈피 노력 전개, △ 미 · 중 · 러 3각관계 재편 향배 주목과 1.5 트랙 전략 소통 활성화, △ 동북아 지역의 소다자 협력 활성화, △ 한 · 러 간 전략 소통 채널의 확대 및 對러 공공외교의 활성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목 차

- 1. 머리말
- 2.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미러관계 동향
 - 가. 신푸틴독트린과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
 - 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러관계
- 3. 러시아의 한반도 안보
정세 관련 정책적 입장
 - 가. 대(對)한반도정책
기조와 목표
 - 나.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책적 입장과 특징
- 4. 맺음말: 정책적 고려사항

*러시아의 외교안보적
당면 현안은
미국과 서방의
對러 제재 해제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큰 틀의
미·러, 중·러관계의
연장선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머리말

- 2017년 현재의 세계질서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는 ‘초불확실성(Hyper-uncertainty)’이며,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세계정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금년 1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위대한 미국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을 내세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기후변화 협정 탈퇴, TPP 폐기, NAFTA 재협상, 한미 FTA 재협상, 유네스코 탈퇴 등 이전과는 다른 대외정책의 모습이 나타남
 - 이 밖에 브렉시트(Brexit)의 진행, 유럽권에서 극우세력의 확장, 시리아 내전과 우크라이나 위기의 지속, 유럽에서의 각종 테러 발생, IS의 퇴각 등도 전개되고 있음
 - 유라시아 및 동아시아와 연계된 한반도 안보정세 역시 ‘초불확실성’의 연장선에 있으며, 무엇보다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과 함께 역내 안보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한반도를 위요한 동북아 안보질서의 핵심은 ‘북한 문제,’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이며, 이의 해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
- 한편 러시아 푸틴 정부는 2014년 3월 크림병합에 이어, 시리아 내전에서의 군사적 개입과 종전 협상, 이란 핵협상에의 주도적 역할 등 국제무대에서 주요 행위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나가고 있음
 - 러시아의 외교안보적 당면 현안은 미국과 서방의 對러 제재 해제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큰 틀의 미·러, 중·러관계의 연장선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는 미 의회가 통과시키고 8월 2일 발효된 ‘러시아, 이란, 북한 관련 제재법안’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며, 푸틴 대통령이 직접 미 외교관 75명 추방을 밝히는 등 강경 대응 입장을 표출함
 - 당분간 미러관계는 미 대선에서의 러시아 커넥션 이슈, 미 의회의 對러 불신 지속, 중·러 군사협력과 북핵 관련 공조 등 협력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반면 푸틴 정부는 그간 비교적 관망하던 자세를 벗어나 최근 들어 북핵·미사일 문제 해법에 보다 적극적이며, 공세적 양태를 표출하고 있어 주목됨
 -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이 인터뷰 형식을(6.27) 빌어 북 핵·미사일 해법을 제시하고, 중·러 정상회담을(7.4) 계기로 쌍중단, 쌍궤병행의 해법에

- 동조 · 공론화하는 등 중 · 러 정책 공조로 대응하고 있음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에서도 초기부터 직접 가담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띠었으며, 부르미스트로프 6자회담 차석대표와 최설희 미주국장 간 회동, 모스크바 비확산회의 개최를 계기로 대화 자리 마련 등 중재자적 역할을 탐색하고 있음
- 현재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역내 안보질서 재편과 함께 미래 안정과 평화, 번영과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변곡점에 놓여 있음
- 비록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창조적 해법을 찾아가 노력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진력하는 것이 중요함
- 이 글에서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출범에 주목하면서 러시아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미러관계 동향, 동아시아 · 한반도정책을 살펴보고자 함. 나아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적 입장을 분석 · 평가하고, 한 · 러 간 정책 공조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2.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미러관계 동향

가. 신푸틴독트린과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

- 러시아는 북유럽에서 중앙아, 극동으로까지 연결된 광활한 영토로 인해 기본적으로 세계전략을 구사하며, 미국에 대한 라이벌 인식과 세계질서 주도국 인식, ‘강국으로 부활한 러시아’ 입장에서 대국주의(大國主義), 실용적 전방위 강대국 외교노선을 전개하고 있음
- 또한 세계는 지금 다극화와 다극질서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자주의 해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BRICS, SCO, CSTO, CICA, APEC, EAS, ASEAN을 활용하는 한편,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국제법과 국제규범 준수 등을 강조함
- 특히 2014년 3월 크림병합 이후에는 국내 애국주의 열풍을 활용한 가운데 ‘신(新)푸틴독트린’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전개해 나감
- 신푸틴독트린은 △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의 절대 사수, △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미국과 서방 측의 책임이 존재, △ 다극질서하 러시아의 역할 제고, △ 국가 주권에 입각한 국제법 준수와 내정불간섭 원칙 강조, △ 핵무기 포함 강력한 국방력 강화 등이 핵심을 이룸¹⁾
- 러시아는 2014년 3월 크림병합 이후 군사안보 문서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은 2014년 12월에 제정된 신군사독트린을 비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라이벌 인식과
세계질서 주도국 인식,
‘강국으로 부활한
러시아’ 입장에서
대국주의(大國主義),
실용적 전방위
강대국 외교노선을
전개하고 있음

푸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 성향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외교안보 진영에의
친(親)러 인사 배치
등으로 미러관계
개선에 기대를
가졌으나,
미 대선에의
러시아 커넥션 조사,
미 의회의 대러
제재 지속 등으로
답보 내지 갈등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

롯데 해양독트린(2015.7), 국가안보개념(2015.12), 대외정책 개념(2016.11), 2030 경제안보전략(2017.5) 등에 토대를 두고 전개되고 있음(www.scrf.ru)

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러관계

-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존 오바마 행정부 집권기 극심한 갈등 양상을 표출했던 미러관계의 향배가 주목을 받음
 - 미러관계는 미중관계와 더불어 세계 정치경제질서 재편의 중심축이자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역대 안보질서 구도의 성격을 가늠 짓는 바로 미터이자 동아시아질서 재편 향배의 가늠자임²⁾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미러관계의 핵심은 △ 트럼프의 리더십과 친(親)러 행보, △ 트럼프와 푸틴 간 상호 호감과 친밀, △ 러시아의 대선 개입 스캔들 조사와 관계 개선의 장애요인화, △ 상호 기대감 속 불신 점증, △ 협력과 갈등 사안의 혼재, △ 미 의회의 對러 강경책과 영향력 제고, △ 외교관 맞추방, △ 시리아 내전과 북한 핵 문제의 우선 정책 현안으로의 대두 등으로 집약됨
 - 푸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 성향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외교안보 진영에의 친(親)러 인사 배치 등으로 미러관계 개선에 기대를 가졌으나, 미 대선에의 러시아 커넥션 조사, 미 의회의 대러 제재 지속 등으로 답보 내지 갈등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
 - 푸틴 정부의 미국에 대한 전략적 입장은 러시아의 세계전략 연장선에서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미(對美) 인식, 외교안보 진용의 정책 정향, 미·러 양국 간 주요 현안과 정책 우선순위 향배와 연계되어 있음
- 러시아는 이미 2009년 7월에 성안한 ‘국가안보전략 2020’에서 미국을 ‘라이벌’로 설정한 바 있으며, 군사안보적 전략 균형은 물론 MD 구축, 핵무기 감축, 국제테러리즘 등 글로벌 현안과 관련해 다극체제, 다자주의, 집단적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구도를 창출하고자 노력함
 - 미국에 대한 견제의 측면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발전시키고 있으며, BRICS 정상회의의 정례화, 유엔의 역할과 활동 강화 지원, SCO, CSTO, EurAsEC을 비롯한 지역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 등도 국제질서 다극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음
- 러시아는 무역, 투자, 과학기술 등의 부문에서는 미국과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입장이며, 또한 글로벌 전략 안정과 국제안

보를 다루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즉 국제테러리즘, 마약 퇴치, 기후변환 대처 등 글로벌 사안은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반면, 유럽 MD구축 문제, 시리아 사태 및 북한 핵 문제에의 군사적 개입 등에는 반대하며 독자적 목소리를 표출
 - 한편, 푸틴 대통령은 2011년 총선과 2012년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러시아 내 反정부, 反푸틴 시위와 관련해 그 배후에 미국이 사주하였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미국을 기본적으로 세계질서의 재편 속에 견제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특히 군사안보 측면에서 MD 구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등 대미(對美) 전략적 대립각을 취하고 있는 상황
 - 미러관계에 대해서도 양자 정치대화, 협력이 강력한 경제협력의 토대 위에서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러시아의 대미(對美) 인식과 이해의 기저에는 견제자 및 글로벌 현안에의 비판적 조력자의 성격이 깔려 있으며, 실질적으로 러시아는 대내 문제의 간섭 금지, 유엔 헌장 강조, 국제법적 규범 준수 등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견제와 불편한 입장을 지속 견지하고 있음
-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 러시아는 트럼프의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과 발언에 기대감을 가지는 한편 우려와 경계감도 동시에 표출함
-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 직후 텔레그램을 통해 축전을 보내는 등 발 빠르고 우호적인 행보를 시현
 -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에 대해 “트럼프는 전형적 정치인들과 달리 새로운 관점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을 좋아한다”고 언급하는 등 친밀감을 표시하고 우호적으로 평가(6.1)
 - 반면,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취임 이후 “크렘린궁은 트럼프에 대해서도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표명, 신중한 태도를 표출
 - 안드레이 페도로프 전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푸틴 대통령 참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NBC 방송, 2.20)
 - 또한 트럼프의 2~3개월 동안의 언행을 참조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얇은 얼음 위에서 춤추고 있으며, ‘순진한 모험가(risk-taker who can be naive)’인 것으로 묘사하는 등 트럼프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음(연합뉴스, NBC 방송, 2.20)
 - 러시아전략문제연구소(RISS)를 비롯한 여타 러시아 싱크탱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대해 한편으로는 관계 개선의 기대를 하면서도

종합적으로
러시아의 대미(對美)
인식과 이해의
기저에는 견제자 및
글로벌 현안에의
비판적 조력자의
성격이 깔려 있으며,
실질적으로
러시아는
대내 문제의
간섭 금지,
유엔 헌장 강조,
국제법적 규범 준수
등을 강조

시기상조 내지 갈등 지속이라는 혼재된 전망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음
(www.riss.ru, www.russiacouncil.ru, www.imemo.ru, www.carnegie.ru)

미·일 대(對)

중·러의 동아시아

질서 구도와도

연계되어 있으며,

미·러 간 대립 확대는

중·러의 합동 군사

훈련 강화 등

군사적 측면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미러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첫째, 트럼프의 푸틴에 대한 호의적 평가와 친(親)러 인식에도 불구하고 미러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미 의회의 반러 정서와 강경책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미 의회 내 반(反)러 정서 및 제재 결의안 등 정책 시스템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됨
 -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 표명했던 것과 달리 NATO, EU에 대한 정책 변화를 나타냄으로써 상대적으로 러시아로 하여금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침
 - 셋째, 미러관계 추이는 초기에는 러시아가 대러 제재 완화 내지 폐기 등 양국관계 개선에 기대를 걸었으나, 미 의회의 대선 관련 청문회 개최 및 조사 진행, 대러 추가 제재 결의 등으로 인해 점차 대미 신뢰가 저하되고 양국 간 갈등이 커져가는 모습을 나타냄
 - 넷째, 상호 불신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예술영역, 극지방 연구와 우주정거장을 활용한 양국의 우주 탐구 협력이 유지되는 등 제한적 협력관계도 지속됨. 일례로 워싱턴 D.C.의 러시아 문화센터는 2017년 6월 20일 2차 세계대전 중 실종된 미군과 소련군에 관한 양국의 공동 조사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
 - 다섯째, 미·일 대(對) 중·러의 동아시아 질서 구도와도 연계되어 있으며, 미·러 간 대립 확대는 중·러의 합동 군사훈련 강화 등 군사적 측면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중·러는 대미 견제의 일환으로 금년 7월 중국 해군이 처음으로 발트해에서 러시아 해군과 합동군사훈련(‘해상연습-2017’)을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러시아 오흐츠크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
 - 여섯째,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은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라는 인식의 공유 속에 상호 친밀감을 유지해 나가는 한편, 국제테러 대처 등 국제안보 현안에는 일정 정도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끝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비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 파장, 북핵·미사일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향후 △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조사 결과, △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반도 병합 해결 여부, △ 미국을 위시한 서방 측의 대러 제재 향배, △ 이란 핵 합의의 불인증 향배, △ 시리아 내전 상황의 휴전 내지 종료, △ NATO 동진과 유럽 MD 구축, △ IS 등 국제테러에 대한 공조 등이 미·러관계 전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3. 러시아의 한반도 안보정세 관련 정책적 입장

가. 대(對)한반도정책 기조와 목표

-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대외정책 목표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제고 및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음
 - 구체적으로 △ 한반도 비핵화,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확산 저지, △ 남북한의 친러시아적 접근 도모, △ 6자회담 재개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유로-태평양국가’로서 아태지역 경제권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며, 한반도에서의 에너지, 교통 인프라 및 물류, 식량 안보, 해양자원, 교육 및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 또한 러시아는 남북한과 동시에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는 입장을 견지해 나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대(對)남북한 균형접근 및 등거리 정책도 변함없이 지속해 나가고 있음
 - 러시아의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에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정책목표와 연계되어 있음
-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한반도의 문제를 세계 질서,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연장선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미일동맹에 대응하는 다른 축으로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 둘째, 역내 안보현안의 당사자로서 소외·배제되지 않고 참여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의 체제 붕괴가 아닌 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면서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환경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 셋째,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서 NPT체제 유지 및 한반도 비핵화의 측면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넷째, 러시아는 남북한 균형접근, 등거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남북한을 다루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다섯째, 전략적 중간자의 입장에서 남북 간 대립·긴장을 우려하고, 북한의 핵실험,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에 대해 양비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존재감과 운신의 폭을 확보하려고 함

역내 안보현안의
당사자로서
소외·배제되지 않고
참여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의 체제 붕괴가
아닌 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면서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환경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9.5)
 “북한인들은
 (체제) 안전을
 느끼지 못하면
 풀을 먹더라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법을 복원하고
 북한을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
 고 언급

- 여섯째, 북한 핵실험의 후속조치와 관련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내용 면에서 북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 포함되는 것에는 중국과 공조해 반대함. 또한 자국의 경제적 실익과 연계된 사안은 초안 변경을 통해 관철하는 등 실용주의적 자세를 보이고 있음
- 끝으로, 신동방정책의 추진을 통한 극동시베리아 개발의 성공을 통해 중국의 중앙아, 극동지역 영향력 확대와 부상을 견제하는 한편, 남북을 함께 엮는 남·북·러 3각 경협을 성사시키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

나.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책적 입장과 특징

- 푸틴 정부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정책적 입장은 푸틴 대통령이 2012년 2월 『모스크보브스키예 노보스티(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에 ‘러시아와 변화하는 세계(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라는 제목의 언론 기고문을 통해 밝힌 내용에 담겨져 있음
 - 첫째, 북한의 핵 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 둘째,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함
 - 셋째, 정치적·외교적 해법을 통해야 하며, 6자회담의 즉각적 재개가 요구됨
 - 넷째, 한반도 현안 당사자들 간 접근에 차이가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거친 대응 조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북한 신지도부에 대해 체제 견고성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됨
 - 다섯째, 북·러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웃이며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 대화를 활발히 해나갈 것임
 - 여섯째, 북한과 선린우호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평양이 핵 포기를 결정하도록 할 것임
 - 일곱째, 한반도에서 상호신뢰가 강화되면 남북한 간 대화도 다시 새로 위질 것이 자명함
- 이는 푸틴 정부의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시각과 정책적 입장을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속 견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³⁾
- 최근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9.5) “북한인들은 (체제) 안전을 느끼지 못하면 풀을 먹더라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법을 복원하고 북한을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한 데서 보듯 푸틴 대통령의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음

- 종합적으로 보아 푸틴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① 북한의 핵 보유 불용; ② 한반도 비핵화 지지; ③ 군사적 조치의 반대와 정치적·외교적 해법의 강조, ④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 ⑤ 북한과의 선린우호 관계 발전 도모하에 북한의 핵 포기 결정을 유인해 내는 정책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⁴⁾
-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먼저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될 경우, “관련 당사국들은 냉정하게 대처해야 하며, 사태를 악화시킬 어떠한 행동도 피해야 한다”고 거의 같은 논조로 유관국들의 자제를 촉구하여 왔음
 - 이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남북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러시아 나름대로 긴장고조와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균형적 중재자 역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됨
 - 그렇지만 북핵 문제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있어 그렇게 높은 우선순위에 위치하지 않고 있음.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사태, 시리아 내전에의 개입, 미러관계 향배, 서방의 대러 제재 등에 더욱 관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임
 - 이에 러시아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소극적, 관망적 자세를 나타내었음
 - 이의 연장선에 북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의 재개, 외교적·평화적 해법 강조 등 원론적인 주장을 지속 견지하였으며, 자신의 독자적 해법 제시보다는 중국의 입장에 편승하는 경향을 띠었음
- 반면 금년 들어 북 핵·미사일 위기가 점차 고조되자, 러시아 나름의 로드맵 제시 등 다소 적극적 자세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됨
 - 지난 6월 27일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은 3단계 접근의 북핵 문제 해결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부르미스트로프 외무부 특임대사가 방북해 이선희 미주국장과 회동하고 모스크바 비핵화회의 개최, 모로조프 국가두마 의원 방북 등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한 중재 역할을 탐색함
-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월 4일 독일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발표된 6개항 가운데 제1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양 정상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엄중한 안보리 결의의 위반으로 북한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일종의 북핵 로드맵을 제시함

금년 들어
북 핵·미사일 위기가
점차 고조되자,
러시아 나름의
로드맵 제시 등
다소 적극적 자세로
변화된 모습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월 4일 독일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러 공동성명’을
발표

푸틴 대통령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발전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

남·북·러

3각 협정의

실천 환경도

이전에 비해 좋아질

가능성이 있음

- 언론 보도에 따르면(중앙일보, 2017.7.6) 주 내용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및 한미 연합훈련 중단 ⇒ 협상 개시 ⇒ 무력불사용, 불침략, 평화공존을 포함한 총체적 원칙 확정 ⇒ 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 일괄타결의 순서로 되어 있음

- 여기의 일괄타결에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전보장체제를 추구하고 최종적으로 관련국(미북)의 국교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짐

- 크게 보아서는 중국이 주장한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쌍궤병행(雙軌並行, 북한 핵 포기와 북미 간 평화협정 동시 추진)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양국 정상은 “9.19 공동성명 준수를 촉구하였으며, 군사적 수단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음

- 즉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효율적 해결 방안은 ‘대화와 협의’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과연 북한의 제6차 핵실험, 화성-12호, 화성-14형 발사로 인해 고조된 미국의 對북 제재와 압박 강화 국면과 맞물려 어떤 경로를 밟아갈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음

○ 현재 북핵·미사일 문제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아 또 다른 도전과 기회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여겨짐

- 대화를 강조하는 한국의 신정부가 출범하였고, 북중관계가 소원한 상태로 변모함에 따라 북한의 러시아에로의 접근 정도와 필요성도 더욱 커진 상황임

- 푸틴 대통령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발전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동북 3성의 발전되어 가는 상황을 지경학적·지전략적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도 높아짐

-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 남·북·러 3각 협정의 실천 환경도 이전에 비해 좋아질 가능성이 있음

- 과연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발전에 부합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인지 전략적 대차대조표를 통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임

○ 동아시아·한반도 정세는 미·일·중·러 역내 유관 국가 모두 안정과 평화, 번영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토대로 각국이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음

- 아울러 갈등과 견제, 경쟁이라는 요소도 담겨져 있는 등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는 가운데 역내 국제질서 구도 축, 유관국 간 삼자·양자관계 구도가 서로 얽혀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임

- 주지하는 바처럼 현재 당면한 한반도 평화구축의 핵심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에 있음
 - 이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견과 WMD 비확산, NPT 체제 유지 등 국제법과 국제규율을 준수하는 데서 비롯됨
 -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대남 도발을 멈추고,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적 고립 상태를 벗어나,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긴요함
 - 불량국가, 공포정치, 인권탄압, 세습왕조 등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쿠바, 베트남, 미얀마, 이란의 사례에서 보듯 개혁·개방, 국제규율 준수의 자세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국가로 변모하는 것이 관건임

4. 맺음말: 정책적 고려사항

- 한·러 간 협력 방안으로는 먼저, 문재인 정부와 푸틴 정부 간 북핵 문제와 관련된 정책 공조 부문을 찾아 공통점을 살릴 필요가 있음
 - 북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을 통한 해결, 대화를 통한 외교적·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단계적·포괄적 해법 등은 상호 의견 일치를 보는 부문임
 -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해 러시아 푸틴 정부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한국 신정부 역시 러시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서 커다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음도 좋은 여건임
- 러시아의 건설적인 중재자적 역할 제고와 활용
 - 러시아는 국제질서 재편의 측면에서 보아 미·중 사이에 ‘전략적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역내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데 일조하고 있음
 - 또한 러시아는 역내 정책 목표로서 제시된 ‘유라시아권 동서 전략적 균형 도모’와 ‘세력균형의 유라시아 연대망 구축’을 잘 가꾸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나아가 러시아는 역내 안보 현안의 ‘조정자,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음.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 현안과 관련해 러시아는 당사자로 참여함은 물론 이를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북핵 문제 해결에의 중재, 조정 역할 등 한반도 안보 현안에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점이 중요하며, 북한 개혁·개방에의 긍정적 영향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해
러시아 푸틴 정부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한국 신정부 역시
러시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서
커다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음도
좋은 여건

푸틴 대통령은
2016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북한과 일정한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대치 국면인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겠다”고
천명

통일한국에의 후원자 등 바람직한 효과의 측면을 담고 있다고 판단됨

-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도 보다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러시아로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대북 소통 채널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이미 푸틴 대통령은 2016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북한과 일정한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대치 국면인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금년 5월 신정부의 대러 특사단 방문 시 대북 특사 파견 의향이 있음도 밝힌 것으로 알려짐 (KBS 뉴스, 2017.5.26)
 - 반면에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독일 괴르버 재단 연설에서(7.13) “북한이 러시아의 가까운 이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북한과 아무런 특별한 채널이 없다. 북한의 새 지도자가 만든 관례를 볼 때 어떤 나라도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채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연합뉴스, 2017.7.14)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음
 - 우리로서는 러시아가 전략적 균형자, 세력균형자, 건설적 중재자,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자 등의 제반 역할을 충실히 잘 실천해 나가,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긴요함
- 한편, 금년 9월 6일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한·러 정상회담이 이뤄졌으며 △ 한·러 정상 차원의 전략적 협력 기반 구축, △ 한·러 양자 수준에서의 극동지역 개발 참여와 실질 협력 기반 마련, △ 新북방정책과 新동방정책 간 정책적 정합성 및 협력 인식 공유, △ 남·북·러 3각 경협 미래 비전과 중장기적 추진 의지 제시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반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원유공급 중단 요구 등 추가적인 대북 압박과 제재 문제에 있어서는 對러 설득에의 한계점도 노정
 - 추후 한러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기(既)체결된 MOU의 성실한 이행과 추진 점검, △ 신동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유라시아 협력의 연결성, 정합성 활용,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충실한 활동, △ 한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 FTA 체결 준비 만전 등이 긴요함
- 미러관계의 한러관계와의 동조화 탈피 노력 전개
 - 미러관계 향배는 현실적으로 한러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갈등의 진행은 동조화 현상으로 발현되어 한러관계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미러관계와 한러관계 간 탈(脫)동조화 노력을 전개하면서 미국의 對러 제재 여파, 러시아의 사드 배치 반대, 북핵 중재안에 대한 이견 등 한·러 간 잠재적 갈등 요소를 사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미국의 對러 제재 향배와 파급영향 분석 및 한·러 경협에의 부정적 파급영향 최소화 방안 강구, ‘조건부 사드 배치론’ 등 對러 설득 논리 마련 및 외교적 대응 강화, 러시아의 3단계 해법과 쌍중단, 쌍궤병행에의 동조·편승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도 필요함
- 미·중·러 3각관계 재편 향배 주목과 1.5 트랙 전략 소통 활성화
- 미·중·러 3각관계는 미·중의 G2체제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2012년 5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재등장 이후 △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병합, △ 이란 핵협상 타결, △ 시리아 내전예의 개입, △ 브렉시트 여파 등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영향력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 축(軸)으로 부각됨
 - 미·중·러 삼각구도 속 미·중, 미·러, 중·러 양자관계 변화는 기본적으로 전략적 세력균형의 도모와 세력전이를 둘러싼 자국 국익 극대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 패권경쟁의 연장선에 위치함
 - 또한 트럼프, 푸틴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 아베 총리 등 주요국 지도자들의 스트롱맨(Strongman) 리더십과 더불어 향후 4~5년 정도의 집권 안정기가 이뤄질 예정임
 - 우리로서는 미·중·러 3각관계 향배 및 미·중, 미·러, 중·러관계 변화에 유념하면서, 한·미, 한·러, 한·중 등 양자 협력관계 강화와 1.5 트랙의 전략 소통 채널 활성화가 바람직함
- 동북아 지역의 소다자 협력 활성화
- 한·러는 역내 존재하는 한·미·중, 미·중·러, 한·미·러, 한·미·일 등 다양한 소다자 구도 속에서의 러시아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소다자 구도가 협력의 틀과 성격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 의제 발굴과 네트워크화가 긴요함
 - 이를테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남·북·러 3자가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GTI의 활성화, 한·중·러, 한·러·일 소다자 협력 토대 위에 북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나가고, 국제규율, 국제법을 준수하는 국제사회의 정상국가 일원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전략 소통 채널의 확대 및 對러 공공외교의 활성화
- 한러대화(KRD), 한러포럼,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등을 비롯해 1.5 트랙의 전략 대화 재개, 국가안보실과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간 전략

우리로서는
미·중·러
3각관계 향배 및
미·중, 미·러,
중·러관계 변화에
유념하면서,
한·미, 한·러,
한·중 등
양자 협력관계 강화와
1.5 트랙의
전략 소통 채널
활성화가 바람직함

한·러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영토 분쟁을 포함해
사실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력 비전을 가꾸고
공동이해를
극대화시켜 나갈
여건을 갖추고 있음

대화 정례화 등 한·러 간 전략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 긴요함
- 또한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내실화를 위해 양국민 간 상호 이해 제고가 중요하며, 역사·문화·예술을 중시하는 러시아에 대한 공공외교 활성화가 바람직함

- 한·러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영토 분쟁을 포함해 사실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력 비전을 가꾸고 공동이해를 극대화시켜 나갈 여건을 갖추고 있음
- 미래 한·러 간 협력 비전의 방향은 지난 27년에 걸쳐 이루지 못한 미완의 잠재력이 완성된 상태로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며,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러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긴요함
- 특히 2018년은 한·러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며, 2월 평창 동계올림픽, 6월 FIFA 러시아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음. 아울러 2020년 동경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동북아 지역에서 세계 스포츠·평화 행사가 잇달아 개최될 예정임
- 역내 국가 모두 평화와 번영이 이뤄지는 상징적 대장정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한국과 러시아가 핵심적 피스메이커(peacemaker)로 커다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함

주석

- 1) 신푸틴독트린 내용에 대해서는 장덕준, “‘신푸틴독트린’과 러시아 대외정책의 향방,” 『Russia-Eurasia FOCUS』(2015.1.26.) 참조.
- 2) 푸틴 집권기 미러관계에 대한 분석은 서동주, “러시아 푸틴 정부의 대미관계: 특징, 전망, 정책적 함의,” 『JPI 정책포럼』(2014-01); 고재남,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미러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2017-04) 참조.
- 3) 고재남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 위기에 대한 인식을 미국책임론, 대북 제재 무용론, 우발적 전쟁발발과 재앙론, 동북아 핵확산 우려 및 군비경쟁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론, 남북러 3각 경협 장애론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고재남, “러시아의 대북 핵미사일 정책과 대러 정책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2017-41), pp.3-6.
- 4) 이상준·서동주, “각국의 한반도 인식—러시아,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의 인식과 입장,” 『ISSUE BRIEF』(여시재)(2017-026).

참고문헌

- 고재남. “러시아의 대북 핵 · 미사일 정책과 대러 정책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2017-41).
- _____.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미러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2017-04).
- 김정기. “최근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세 인식과 전략적 입장.” 「중소연구」 제40권 제1호(2016 봄).
- 서동주. “러시아 푸틴 정부의 대미관계: 특징, 전망, 정책적 함의.” 「JPI 정책포럼」(2014-01).
- 신범식.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동북아 지역 정치: 지역 세력망구도 변화와 러시아 의가능성 및 한계.” 「EAI 국가안보패널 연구보고서」(2014.8).
- _____.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초국경소지역 개발 협력과 동북아시아 지역 정치.” 「국제정치논총」 제53집 3호(2013).
- 이상준 · 서동주. “각국의 한반도 인식—러시아,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의 인식과 입장.” 「ISSUE BRIEF」(여시재)(2017-026).
- 장덕준. “‘신푸틴독트린’과 러시아 대외정책의 향방.” 「Russia-Eurasia FOCUS」(2015.1.26).
- 러시아국제문제연구소 홈페이지(<http://russiancouncil.ru/>).
- 러시아세계경제 · 국제관계연구소 홈페이지(<https://www.imemo.ru/>).
- 러시아연방보안국 홈페이지(<http://scrf.gov.ru/>).
- 러시아전략문제연구소 홈페이지(<https://riss.ru/>).
- 카네기모스크바센터 홈페이지(<http://carnegie.ru/>).
- KBS뉴스, 연합뉴스 외.

◆ 저자 약력

■ 서동주

現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함. 국제문제조사연구소에서 국제관계연구센터장과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국제안보연구실장을 역임함. 주요 연구 분야는 러시아 정치 · 외교, 한러/북러관계, 동아시아 국제정치 등이며, 최근 연구로 『러시아현대정당사』(저서, 2014)를 비롯해 “한 · 미 · 중 삼각구도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의미”(2016), “러시아 푸틴시기 정치체제 특징”(2013), “푸틴 집권 3기 대외정책 전망과 대러 대응 전략”(2012), “남 · 북 · 러 경제협력과 북러관계”(2012)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편집: 황지나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